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보도시점

배포 시

배포

2026. 7. 15.(수)

2026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작성한 자체정상화계획(’26.4.15일 승인)과 예금보험공사가 수립한 부실정리계획(’26.7.15일 승인)을 승인
- 전년대비 고도화된 대형 은행지주·은행 및 정리당국의 위기대응체계를 반영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회복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아울러 하반기 관계기관(금융위·금감원·예보·SIFI 등)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대형 은행지주·은행과 정리당국의 대응체계를 함께 점검·강화할 계획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에 따라 ’26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10개社*에 대한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을 승인하였다.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은 금융안정위원회(FSB) 권고에 따라 ’20.12월 금산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여, ’22년부터 매년 금융위 승인을 거쳐 마련해오고 있다.

* 금융위는 은행지주회사·은행의 규모 및 복잡성,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신한·KB·하나·우리·농협지주, 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은행을 선정·통보(’25.7.24일)

금융위는 이번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이 금융안정위원회 권고사항 등 국제기준 및 금산법상 작성기준에 대체로 부합하고 중대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금융위는 평가·심의과정에서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들과 정리 시 예상되는 장애요인들을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통보하였다.

[참고]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비교

	자체정상화계획 (Recovery plan)	부실정리계획 (Resolution plan)
① 작성목적	금융기관 자구책을 통한 경영건전성 회복	부실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
② 작성주체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10개社	예금보험공사
③ 평가승인	금감원 평가 및 심의위원회 심의 이후 금융위 승인	심의위원회 심의 이후 금융위 승인
④ 위시대응	평시	적기시정조치
	자체정상화계획 금융기관 자구책 실행 (발동요건 충족시) · 자본 확충 · 유동성 조달 등	부실정리계획 부실금융기관 지정 (부채>자산) · 자금지원 · 계약이전, 매각 등

'25.7.24일 제14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기관 10개社는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하여 '25.10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제출하였다. 금감원은 제출받은 자체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체정상화계획과 함께 '26.1월 금융위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6.4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체정상화계획을 최종 승인하였다.

< 자체정상화계획 작성 · 평가체계 및 주요 일정 >

- **(자체정상화계획 개념 · 의의)**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계획을 마련
 - 위기 발생 시, 사전에 마련된 자구책을 이행하도록 하여 대형 은행지주·은행의 부실화를 예방함으로써 실물경제·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최소화
- **(주요내용)** ①지배구조, ②핵심기능·사업, ③발동지표·요건, ④위기상황분석, ⑤자체정상화수단, ⑥상호연계성 분석, ⑦대내외 의사소통으로 구성 ➡ <참고2>
 - 심각한 경영 위기상황이 발생(“③발동지표·요건”에 따라 판단)하는 경우, 동 계획에 따라 사전에 마련한 적절한 자구책을 조치(“⑤자체정상화수단” 이행)



심의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전년도 자체정상화계획 승인 과정에서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들이 금번 자체정상화계획 작성 과정에서 대체로 충실히 이행된 것으로 평가하였고, 내년도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반영해야 하는 보완·개선 필요사항을 새로 발굴하여 제시하였다.

금번 제시된 주요 보완·개선 필요사항에는 금융사들에 대한 사이버 침해 사고의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자체정상화계획상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체계를 점검·보강할 것, 신규 발동지표인 ‘디지털 뱅크런 지표’를 보다 정교하게 보완하여 유동성 모니터링 지표로서의 유효성을 제고할 것, 시장 공통의 위기 상황시 금융사별 정상화 수단이 중복 실행될 가능성을 감안하여 효과를 보수적으로 추정하고 모의훈련*에서도 이를 고려할 것 등이 포함되었다.

* 10개 금융기관은 위기상황 시나리오 등을 바탕으로 매년 자체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동 훈련 결과 파악된 개선 필요사항을 차년도 자체정상화계획에 반영

한편 예보는 '25.10월부터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하여 '26.4월 금융위에 제출하였으며, 금융위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6.7.15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부실정리계획을 최종 승인하였다.

< 부실정리계획 작성·평가체계 및 주요 일정 >

- **(부실정리계획 개념·의의)** 부실정리계획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건전성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여 정리당국이 해당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계획으로,
 - 평시에 대형 은행지주·은행의 정리가능성을 제고하여 실제로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고 질서정연한 정리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
- **(주요내용)** ①전략적 사업분석, ②정리전략, ③재원조달 및 운영의 연속성, ④금융 소비자 보호 등 커뮤니케이션 관리체계, ⑤정리가능성 평가로 구성 <참고3>



예보는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 정리재원 조달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등 전년도 부실정리계획 승인 과정에서 제시된 보완·개선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하였다. 아울러, 금융체제상 중요한 금융기관 주도로 실사(due diligence) 역량 점검을 실시해 부실정리계획의 실효성과 이행가능성을 제고하고, 아시아 6개국과 공동 위기대응훈련('25.11월)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였다.

심의위원회는 예보가 부실정리계획 보완·개선사항을 전반적으로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다만, 내년도 부실정리계획에는 가치평가 부문 정리가능성 제고 등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모의훈련 실시, 디지털뱅크런 대응전략 강화 등 추가적인 보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올해 승인된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은 전년도에 비해 고도화된 위기대응체계를 반영하고 있으며, 대형 은행지주·은행 및 정리당국이 위기 상황에 보다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등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회복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 제도는 1년을 주기로 운영되며, 추후 선정될 '27년도 '금융체제상 중요한 금융기관' 10개사에 대해서도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에 대한 평가·심의 및 승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의 연계성 강화와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26년 하반기 중 유관기관(금융위·금감원·예보·SIFI 등)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 개별 금융회사의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은 경영상의 비밀 등이 포함되어 있어 대외 공개할 수 없습니다.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전은주 (02-2100-2910)
		담당자	사무관	이지은 (02-2100-2904)
	금융감독원 은행검사1국	책임자	국 장	김남태 (02-3145-7050)
		담당자	팀 장	이상돈 (02-3145-7090)
	예금보험공사 SIFI정리부	책임자	부 장	민윤홍 (02-758-0541)
		담당자	팀 장	김영운 (02-758-0542)
			팀 장	장진모 (02-758-0537)
			팀 장	이주홍 (02-758-0533)

- ①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선정 (「금산법」 제9조의2, 영 제5조의4)
 - 금융위는 매년 금융기관의 기능과 규모,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선정
- ②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작성 및 금감원의 평가 (「금산법」 제9조의3~4, 영 제5조의5)
 - (자체정상화계획 제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금감원에 제출
 - (자체정상화계획 평가) 금감원은 자체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후 금융위에 자체정상화계획 및 평가보고서를 제출
- ③ 예보의 부실정리계획 수립 (「금산법」 제9조의5)
 - (부실정리계획의 수립) 예보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하여 금융위에 제출
- ④ 금융위의 자체정상화계획 · 부실정리계획 심의 및 승인 (「금산법」 제9조의6~7, 영 제5조의6)
 - (심의) 금융위에 자체정상화계획 ·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각각의 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심의
 - (승인) 금융위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의 승인여부를 결정*
 - * 자체정상화계획이나 부실정리계획이 미흡할 경우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또는 예보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완 또는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 가능
- ⑤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조치 요구 등 (「금산법」 제9조의8~9)
 - (정리장애요인 해소 요구) 금융위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정리시 예상되는 장애요인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필요시 이의 해소를 요구
 - (자체정상화계획에 따른 조치)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자체정상화계획상의 경영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계획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 금융위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자체정상화계획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거나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조치의 이행을 요구가능

◆ 자체정상화계획은 총 7개 부문으로 구성·작성됨

- 시스템적 중요도가 높아 위기시 우선적으로 유지해야할 핵심기능·핵심 사업을 D-SIFI가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위기인식 → 보고·의사결정 → 자체정상화수단 집행 등 위기 대응체계를 사전에 마련
- 이 때, 위기를 조기에 인식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상황분석을 통해 발동지표·발동요건을 설정하고 동 계획의 실효성 있는 관리와 실행이 가능하도록 경영정보시스템을 구축

- ① **(지배구조)** 자체정상화계획의 실효성 있는 작성, 관리 및 실행이 가능하도록 이사회, 임직원 등의 책임·권한 및 업무절차 등 지배구조를 마련
- ② **(핵심기능·사업)** D-SIFI가 제3자에게 공급하고 있는 주요 기능 및 사업 중 위기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할 핵심기능(예: 지급결제 등)과 자체 경영 정상화에 중요한 핵심사업(예: 개인금융 등)을 선정
- ③ **(발동지표·요건)** 위기상황 조기인식 및 위기대응에 충분한 시간 확보를 위해 자본적정성 및 유동성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지표(발동지표)를 선정하고, 최저규제비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임계치(발동요건)를 설정
- ④ **(위기상황분석)** 자체정상화계획 실행이 예상되는 가상의 위기 시나리오를 종류별(고유위험, 시장위험, 결합위험 등)로 마련하고, 동 계획의 적정성을 점검·보완
- ⑤ **(자체정상화수단)** 위기상황별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체정상화수단을 선정하고 집행에 따른 발동지표의 개선효과와 장애요인을 분석
- ⑥ **(상호연계성 분석)** 그룹내 또는 외부 거래상대방과의 거래관계에서 파생되는 상호연계성 분석을 통해 위기전이 가능성을 파악하고 중요 자회사를 선정
- ⑦ **(대내외 의사소통)** 위기시 감독당국 및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을 위한 업무체계를 마련, 자체정상화계획의 실효성 있는 관리 및 실행을 지원하는 경영정보시스템을 구축

◆ 부실정리계획은 총 5개 부문으로 구성·작성됨

- 시스템적 중요도가 높아 D-SIFI 정리 시 우선적으로 유지해야할 기능·사업을 예보가 선정하고, 금융안정 및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정리전략을 수립
- 정리전략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조달방안 마련 및 체계적 의사결정 체계 등을 수립하고, 부실정리계획 작성과정에서 파악한 정리시 예상되는 정리장애요인의 해소방안을 마련

- ① **(전략적 사업분석)**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조직·재무·상호연관성 등 고유특성과 중요자회사, 핵심 기능·사업·공유서비스 등을 분석·선별
- ② **(정리전략)** 다양한 위험요소를 감안한 부실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금융안정을 유지하면서 현행 법령상 실행 가능한 정리전략을 검토하고, 사업재조정 등을 통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조속한 경영정상화 추진
- ③ **(재원조달 및 운영의 연속성)** 정리전략의 이행에 소요되는 재원조달방안을 검토하고, 정리과정에서 핵심기능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의 연속성 유지방안을 마련
- ④ **(금융계약자 보호 등 커뮤니케이션 관리체계)** 질서정연한 정리를 위해 D-SIFI 및 정리당국의 의사결정조직과 역할을 정비하고, 원활한 정보제공을 통해 금융시장 및 예금자 불안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 도출
- ⑤ **(정리가능성 평가)** 정리전략 추진 시 질서정연한 정리에 장애가 되는 내·외부적 요인을 파악하고, 질서정연한 정리를 위한 해소방안을 마련